

광주시·전남도 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 자료

5조6천억 들여 광산 진곡산단에 조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유치에 나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 본선이 16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관련 광주·전남 후보지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후보지 평가자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시·도의 전략을 담은 것으로 후보지 평가와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후보지 평가 자료에 어떤 내용 담겼나 =시·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광주시 광산구 진곡·고룡·오성·하남동 일원 진곡산단단지 191만1천㎡를 제안했다. 또 의료산업·기업유치를 위해 산단단지 기반 시설비를 지원해 조성원가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5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비 부문에서 광주시는 지방비 2천952억원, 민자 3조3천억586억원을 유치하겠다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1조59천64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임상시험 센터 등 의료복합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시·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커뮤니티센터 조성(568억원), 기반조성(400억원), 토지 매입(484억원) 등에 모두 2천9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총 3조3천586억원이 투입되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는 ▲첨단임상시험센터(630억원) ▲벤처연구소(425억원) ▲연구기관 입주 구역 조성(6천800억원) ▲연구개발비(2조5천731억원) 등을 제안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전남대병원 등 국내 우수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된다. 또 벤처연구소는 대학, 연구소 유치를 바탕으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며, 연구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 외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우수 연구소가 입주하게 된다.

시부담 2천9백억 민자 유치 3조3천억

첨단의료기기·임상시험 센터 등 설립

시는 또 신약센터, 의료기기 센터, Bio 자원센터 등 의료연구 개발 지원기관 운영법인 설립·운영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의료복합단지 입지 예정지인 진곡산단에 의료기관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의료 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 의료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후생복지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전국 11개 지자체 유치경쟁=첨단복합단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1곳에 달한다.

광주시·전남도는 전남대·조선대 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우수한 의료시설 보유현

황과 함께 인구 대비 의료분야 연구인력, 임상서비스 인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중인 광산업·디지털 가전산업·로봇산업·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기술 융복합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의 고도화와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비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복 오성, 대전, 대구·경북 등은 첨단복합단지 유치에 지역의 사활을 걸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오성은 국가 유일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대전은 우

수 연구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대덕특구 등을 내세워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부산과 원주, 인천 등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최종 입지 선정=정부는 이달 말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240명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가운데 평가위원 60명을 무작위로 뽑아 각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한 뒤 현장실사를 거쳐 이달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실사는 16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은 총 6개 항목으로 연구인력, 의료개발기관 유치 실적과 집적 연계 여부, 정주여건, 지자체의 노력, 국토균형발전 효과 등을 점수로 매긴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불교계 시국선언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 시국선언 준비모임 주최로 열린 불교계 시국선언에서 법타스님(전 운해사 주지)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헌법 소원 물 건너 가나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키로 했던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한 헌법 소원이 '용두사미'로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을 영남 2개, 호남 1개 등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눈데 대한 헌법 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헌법 소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특별법 헌법 소원에 대해 일부 지역 의원들이 '현실성' 등을 거론하며 시큰둥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탄력을 잃을 전망이다.

지난주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과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

는데 실패하면서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러나 추후 회동을 통해 헌법 소원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오찬간담회 일부 의원들 시큰둥 추동력 잃어

호남출신 검찰총장 나오나

정부·청와대 인사 폭·시기, 지역 안배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밤미 이후, 국정쇄신책을 제시할 예정임에 따라 인적쇄신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호남 인맥을 중용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일단 시기를 놓고는 조기 개각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후부터 속도를 내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각을 단행해 국면 쇄신에 나서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중 개각론을 주장하고 있다. 7월 말 또는 8월 초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기 개각론이 우세하다. 이왕 국정쇄신책을 제시하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총장과 국제청장의 인선은 뜨거운 감자며 지역 안배가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는 권재진(56·대구) 서울고검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권 고검장이 임명될 경우 검찰, 국제청, 국가정보원, 경찰 등 4대 사정기관장 가운데 국제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부담이 있다.

계각을 하지 않을 경우 김경철 법무부장관 역시 TK출신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TK독식' 비난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청과 검찰의 집중 표적이 되면서 비극이 발생

했다든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인 선과 함께 법무부장관을 바꾸고, 국제청장 인선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장관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국제청장을 5개월이나 공석으로 뒀던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 수장에 TK출신이 임명된다면 국제청장에는 타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TK출신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 안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에는 호남출신의 김중빈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로는 명동성 법무원수원장과 문성우 대검찰장 등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의 교체와 관련, 호남 인맥의 기용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인재 풀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가운데 한명은 호남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호남 인재 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장관 및 청와대 수석 교체시 호남 출신이 많이 기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토지·환경·기업 규제 개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이용, 환경,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부담금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삼성, 현대처럼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도 육성해 균형잡힌 경제로 만들어야 하며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을 볼 수 없는 만큼 대외 변수

를 보면서 향후 정책 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으로 고용 부진, 금융권 부실채권, 동유럽 위기, 영국의 주택금융 부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경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의 회복을 이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적, 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만큼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보다는 여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쯤 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를 대비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선부터 기대감에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지금까지 경기 하락을 막는데 노력했다면 이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
- 제주도 당일/2박3일/3박4일 여행 상품 소개 -
1. 제주도 2박3일 여행 상품 (299,000원)
2. 제주도 3박4일 여행 상품 (379,000원)
3. 제주도 4박5일 여행 상품 (459,000원)